

하계올림픽 · 신산업 홍보...

도, 뉴욕 · 뉴저지 공공외교 총력

생산 · 소비 · 유통 등
자원 효율적 이용 도모

UN 본부 방문 통해 하계올림픽 SDGs 연계 비전 공유
뉴저지주 의회 등과 해상풍력 · 바이오헬스 협력 논의
특파원 · 향우회 간담회를 통해 재외동포와의 연대도

전북의 지속가능한 미래전략이 미국 동부의 정치, 경제, 외교 현장을 통해 세계에 공개됐다.

전북자치도는 16일부터 17일까지 뉴욕과 뉴저지 일대에서 UN 본부, 경제 기관, 문화단체 등과 고위급 면담을 갖고 전주올림픽 유치 비전 및 전북의 신산업 전략을 설명하며 국제협력의 의연을 넓혔다.

이번 방문은 김관영 도지사를 단장으로 한 전북자치도 대표단의 미국 출장 일정(6월 15일~21일)의 일환으로, 전북자치도는 지난 2000년 자매결연을 맺은 뉴저지주를 비롯해 동부권 핵심 도시들과의 외교 네트워크 확장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대표단은 16일 유엔 본부를 방문해 나비드 하니프 UN 경제사회이사회(UNDESA) 사무차장보, 장육진 경제사회국장

지역화를 공동 추진하고자 함을 제안했다.

하니프 UN 사무차장보는 “도정 정책 방향을 지속가능한 개발로 지향하고 있는 전북특별자치도를 높게 평가한다”며 올해 10월 일본에서 열리는 The international Mayors forum에 전북특별자치도 도시들을 초청하는 한편, 내년 4월 뉴욕에서 개최예정인 2026 ECOSOC partnership Forum과 관련해 협업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문화외교 활동도 활발히 진행됐다. 뉴욕한국문화원에서는 김천수 원장과 만나 전통 공예품인 청사초롱과 매듭 키팅 등을 전달하며 전북 문화의 정체성을 소개했다. 향후 문화교류와 공동 사업 확대도 협의했다.

이어 아시아소사이터티 강경화 회장과의 면담을 통해 전북의 문화 · 산업 전략을 공유하고, Asia 21 등과 연계한 청년 국제교류 프로그램, 공동 프로젝트 참여 등 지속가능한 파트너십 구축도 제안했다.

뉴저지주와의 실질적 교류 재개를 위한 노력도 이어졌다. 뉴저지주 최다선 상원의원인 고든존슨 의원과 앨런 박 하원의원과 만나 뉴저지주와의 실



①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16일(현지시간) 뉴욕 유엔 본부를 방문해 나비드 하니프 UN 경제사회이사회(UNDESA) 사무차장보와 면담을 갖고 악수를 나누고 있다.



②김관영 도지사는 17일(현지시간) 아시아소사이터티 강경화 회장과의 면담을 갖고 악수를 나누고 있다.

질적인 교류협력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특히 금융 · 제약 · 바이오 등 실요성 있는 교류를 추진하는데 의견을 같이 했으며 김지사는 양지역간 교류를 더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의회간 협력에 대해서도 검토를 제안하기도 했다.

뉴저지주 첫 한인 주정부 하원의원인 앨렌박 의원 또한 양지역간 경제 등 분야에 걸쳐 상호 발전적인 교류를 추진에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지사는 양 지역이 농업, 바이오, 문화 등 공동의 관심사가 많으며 앞으로로도 만남을 이어가자고 말했다.

또한 김관영 지사는 한국계 최초로 미국 연방 상원에 진출한 앤디 김 연

방 상원의원과 유선 통화를 통해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두 사람은 지난 2022년 LA에서 전북 농식품 수출과 관련해 인연을 맺은 바 있다.

이번 통화에서는 한미동맹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전북이 제안한 해상풍력, 바이오제약, 문화 분야 등에서 뉴저지주와의 실질적인 교류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지사는 앤디 김 의원의 향후 방한이 성사될 경우 전북 방문을 요청하며, 양 지역 간 우호 증진에 대한 기대감을 밝혔다.

현지 언론 및 동포 사회와의 소통도 병행됐다. 뉴욕 특파원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는 전북의 정책 방향과 전주올림픽 유치 취지를 설명하고 미국 내 홍보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또한 뉴

욕 호남향우회와 만찬 간담회를 갖고 재외 도민과의 연대를 다졌다.

17일(현지시간)에는 전북도 농림축산식품의 미국수출확대를 위해 한양마트와 전북도 농림축산식품 발굴 및 판매 현지 유통망 구축과 연간 120만 불 이상의 수출을 내용으로 한 협약을 체결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이번 방문은 전북의 전략과 비전을 세계에 소개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전북자치도는 글로벌 파트너들과 지속적인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국제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정책 · 문화 · 산업 전반에서 열린 투자 환경과 교류 여건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새만금 국정과제 반영 대응

전북자치도, 정부 직속 전담 TF 구성 컨트롤타워 일원화

글로벌 메가샌드박스 도입으로 규제 완화 등 통합 지원

“새만금 문제는 다른 것보다도 빠르게 정리하고 완료하겠다”

지난달 16일, 군산을 찾은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현, 대통령) 새만금 정상화 필요성과 SOC 조기완성을 직접 언급하며, 속도감 있는 개발과 규제 혁신을 통해 새만금이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거점일 수 있음을 역설했다.

이에 발맞춰 전북특별자치도는 새만금을 ‘속도’와 ‘규제완화’라는 전략 키워드를 중심으로 개발 전환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정과제 반영을 위한 체계적 대응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략은 대통령 공약인 새만금 SOC 조기 완성과 함께 첨단전략산업 육성, 신산업 테스트베드 구축 등과 연계해 있으며, 전북자치도는 국정기획위원회에 단계적 과제 제안과 함께 정치권 공조를 통해 국정과제 채택을 위한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이를 위해 국정과제화의 핵심 실행방안으로 투 트랙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는 ‘새만금 전담 TF’를 정부 직속으로 구성해 부처 간 분산된 정책과 개발 추진체계를 통합하고, 규제완화 · 제도개선 · 전라수립을 일괄 추진하는 컨트롤타워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둘째는 개발, 규제, 투자 기능이 통합된 ‘글로벌 메가샌드박스’ 도입이다. 글로벌 메가샌드박스는 기반시설 조기 구축을 위한 일괄 예타면제, 규제특례 확대, 테스트베드형 산업도시 구축, 민간 투자유치 지원 등을 아우

르는 통합 제도로, 새만금을 단순 개발지를 넘어 세계적인 산업 실험도시이자 민간투자 테스트베드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다.

특히, 의료용 헴프 산업 클러스터, 글로벌 줄기세포 치료 실증단지, 이차전지 R&D 콤플렉스, 하이퍼튜브 종합시험센터 등 미래 첨단산업 중심의 실증사업이 포함돼 있으며, 이는 기존 규제 체계를 넘어서는 유연한 산업 실험공간을 구축하려는 시도다.

도는 또 투자샌드박스를 통해 외국인 고용 규제완화, 협상형 투자 인센티브 제도 도입, 국민연금 등 공적기금의 대체투자 활성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투자-입지-생산-확장’으로 이어지는 기업유치 선순환 구조를 실현하겠다는 구상이다.

도는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정책 일관성과 실행력을 기반으로 한 새만금 개발의 실질적 완성 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새만금 관련 주요 사업이 새 정부 3대 비전(회복 · 성장 · 행복) 중 ‘성장’ 분야의 국가균형발전 과제에 명확히 부합하는 만큼, 국정과제 최종 반영을 위해 행정력과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김미정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새만금은 이제 선안적 비전을 넘어, 실행 가능한 정책으로 완성돼야 할 시점”이라며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반드시 반영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국정기획위 “정부, 추경안 23일 국회 제출 계획”

국정기획위원회는 이재명 정부가 오는 23일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정부의 2차 추경안과 관련해 “(기획재정부 측에서) 추경안을 오는 23일 국회에 제출하는 스케줄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조승래 대변인은 “다만 구체적인

(추경) 규모나 사업 내용 등에 대한 보고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조 대변인은 이날 기재부 업무보고와 관련해 “추경에 대해서 오늘 당국 협의가 있었다는 보고가 있었지만 깊이 있는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추경 편성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이러저러 이야기 있었다”고 부연했다.

앞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2차 추경 규모와 관련해 35조원 규모에 가깝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시

“전북의 경험 배워 국제교류에 역량 펼쳐주길”

문승우 도의회 의장, 개발도상국 지방행정과정 연수생 만나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군산4)은 18일 도의회를 방문한 개발도상국 지방행정과정 연수생 14명을 만나 지방자치 및 지방행정 역량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승우 의장은 이 자리에서 “빠른 경제발전을 이끈 대한민국에서 지방정부와 지방자치는 경제성장의 근간이자 중심축”이라며 “전북의 경험이 연수생 여러분께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오늘의 경험과 인연으로 지방행정 및 국제교류에 마음껏 역량을 펼쳐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라오스 투앙프라방특별시에서 온 ‘이누판 판도라’ 연수생 대표는 “회기중에도 불구하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운영사항을 청취하고 본회의장을 시찰할 수 있어 값진 경험이 되었다”면서 “도의회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18일 도의회를 방문한 개발도상국 지방행정과정 연수생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지리로 돌아가 주민 및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한국 발전공유 및 행정 혁신 사례 전수를 통해 개도국 공공행정 분야 역량강화 지원을 위해 마련된 이번 연수과정은 지난 12일 시작했으며, 오는 6.22까지 11일간 ‘생생형

AI시대, 지방행정 혁신전략과 과제’를 주제로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주관한다. 연수생은 인도네시아 · 라오스 · 필리핀 · 베트남의 국제교류, 기획행정, 인사조직, 디지털 통신 등 다양한 분야의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만호 기자

도의회 예결특위, 2024 회계연도 결산 심사 돌입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방안 마련 등 정책질의 쏟아져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수, 고창1)는 18일 행정부지사에 대한 정책질의를 시작으로, 24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 및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갔다.

이날 정책질에서 정종복 의원(전주3)은 지방세 체납 문제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개선을 약속하고 있음에도 복지 사각지대가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현실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전북자치도에서 매년 100여 명 이상의 고독사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1인가구, 은둔형아파트 등 전수조사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실질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안이 의원(전주9)은 신혼부부 임대보증금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과도한 예산 불용이 발생한 것은 정책 수요 예측에 실패한 결과”라며, 철저한 원인 분석과 개선을 요구했다.

김성수 위원장(고창1)은 대통령 공약 중 안전에 대해 엄정한 책임을 물었다고 한 약속과 관련해, “우리도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도민안전실이 기획부서로 인식되는 현실에 대해 문제 제”라며, “재난과 안전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현장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 정부의 기본소득 정책이 복지와 경제회복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전북도 차원의 정부 대책에 대한 예산 확보와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고창 갯벌지역에서 발생하는 바지락 폐사 문제와 관련해, 새만금 해수 유동 문제를 포함한 원인 규명과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며, “새만금 방조제로 인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에 대한 구제방안과 실효성 있는 대안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한빛원전에 대한 지역사회의 우려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변화가 없는 점을 심각하게 지적하며, 지역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안전대책을 강화하고 투명하게 추진할 것”을 거듭 당부했다.

/이만호 기자

임종명 도의원,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안 발의

조례안은 상임위 원안 가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종명 의원(남원2)이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제419회 정례회 농업복지



환경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임종명 의원은 “기존 폐기물 발생 억제, 순환이용 및 처분에 초점을 두고 있는 ‘자원순환기본법’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전부개정되어 생산 · 소비 · 유통 등 전 과정에서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폐기물 발생 억제, 순환이용 촉진을 도모하도록 관련 조례를 전부개정해서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에 기여하기 위함”이라고 조례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순환이용을 등의 추진실적을 담은 순환경제 목표의 설정 및 지원 △지역 기반의 순환경제 구축 △순환경제촉진위원회의 설치 △순환자원사용촉진 우선구매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임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단순한 폐기물 관리에서 벗어나, 지역 차원에서의 순환경제 기반 구축과 실질적인 자원순환 체계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며, “도민의 삶과 생산 · 소비 · 유통 등 일상 전반에 걸쳐 자원이 순환이용될 수 있도록 행정과 지역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임 의원은 “전북자치도가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사회 조성에 앞장설 수 있도록, 조직과 예산 확보에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요구해 나가겠다”며 조례의 실질적 이행과 목적 달성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5일 제4차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공포 · 시행될 예정이다. /이만호 기자

고창군의회 정례회 폐회

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등 처리

고창군의회(의장 조만규) 제316회 정례회가 지난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 일정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등 3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 등 총 30건의 의안이 마지막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또한 이번 정례회에서는 군정질문과 답변이 실시되었다. 정례회 첫날인 10일 제1차 본회의에서 박성만 의원, 임정호 의원, 최인규 의원의 군정질문이 있었고, 이에 대한 일괄적인 심석성 군수의 답변은 17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이루어졌다.

군정질문에 대한 군수의 일괄 답변이 끝난 후 곧바로 보충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도 실시됐는데, 추가 보충 질의자로는 최인규 의원이 나섰다. 군정질문 · 답변의 자세한 내용은 추후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조만규 의장은 정례회를 마무리 하면서 “회기 기간 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성실히 임해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집행부와 의회의 역할은 서로 다르지만 변화와 성장, 미래를 여는 고창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상호 배려 속에서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하여 건전한 긴장 관계를 지켜나갈 때 군정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전했다.

/고창=김영식 기자